

# 트럼프 “한국과 관세 해결책 모색”…인상조치 조정 가능성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문제삼아…한국, 입법·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 이오와주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

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발언과 달리,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인상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간 무역 협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가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한국 정부 외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나오자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너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

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국회가 다음 달부터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양국 간 본격적인 협의 과정에서 특별법 처리 일정과 연계해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입법 일정과 외교·통상 협상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극한 폭염’ 호주, 산불까지 27일(현지시간) 호주 골드코스트 자콥스웰의 소형 항공기 추락 현장에서 소방관과 긴급 구조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항공기 추락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추락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전히 긴급 구조팀에 의해 진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 러-우크라 4년 전쟁…사상자 200만명 육박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집계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만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국 군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영국 정부 추정치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집계를 내놨다.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총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모두 더한 수치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2만5000명기량으로 파악된다.

CSIS는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41만5000명, 윌평군 3만5000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는 모두 6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전사자는 10만~14만명으로 추정된다.

CS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총사상자가 최대 18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올해 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강대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상자 규모가 늘면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정병제를 실시하고 수감자를 전투에 투입하는 한편 북한에서도 피병을 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매달 수만 명에 달하는 전력 손실에 진격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약 50~230피트(약 15~70미터)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1월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 만 추가로 점령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CSIS의 국방 전문가 세스 존스는 이번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으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0.6%로 둔화했지만, 장기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부재로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는 “부진한 전투 성과와 경제 생산성 하락 등은 러시아가 주요 강대국으로서 심각한 쇠퇴 국면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여전히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 경제, 과학기술 측면에서 더 이상 강대국이라 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바비인형 마텔, ‘케데헌’ 인형 공개

바비인형 제조사 마텔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인공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인형들을 공개했다.

마텔은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장난감박람회에서 27일(현지시간) 케데헌을 모티브로 한 새 완구 제품 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마텔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아메리칸걸닷컴(AmericanGirl.com)에서 케데헌 주인공 루미, 조이, 미리의 개별 인형으로 구성된 ‘아메리칸 걸 케이팝 데몬 헌터스’(사진) 컬렉션을 예약 주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텔은 “각 인형은 캐릭터의 스크린 속 외모와 개성을 반영했으며, 영화의 상징적인 패션, 음악, 태도를 반영한 고급 소재, 섬세한 액세서리 및 스타일링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마텔의 액션 피규어·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 부문 수석부사장 닉 카라마노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열성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팬덤에 힘입은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라며 “넷플릭스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 팬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놀라운 속도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도 2곳, 미성년자 SNS 금지법 추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일부 주 정부가 호주처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고아주는 최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한 카운데 고아주 정보기술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SNS 플랫폼 접근을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호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호주처럼)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라비아해 연안에 있는 고아주는 150만명이 사는 지역으로 인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다.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다.

인구 5300만명이 사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도 최근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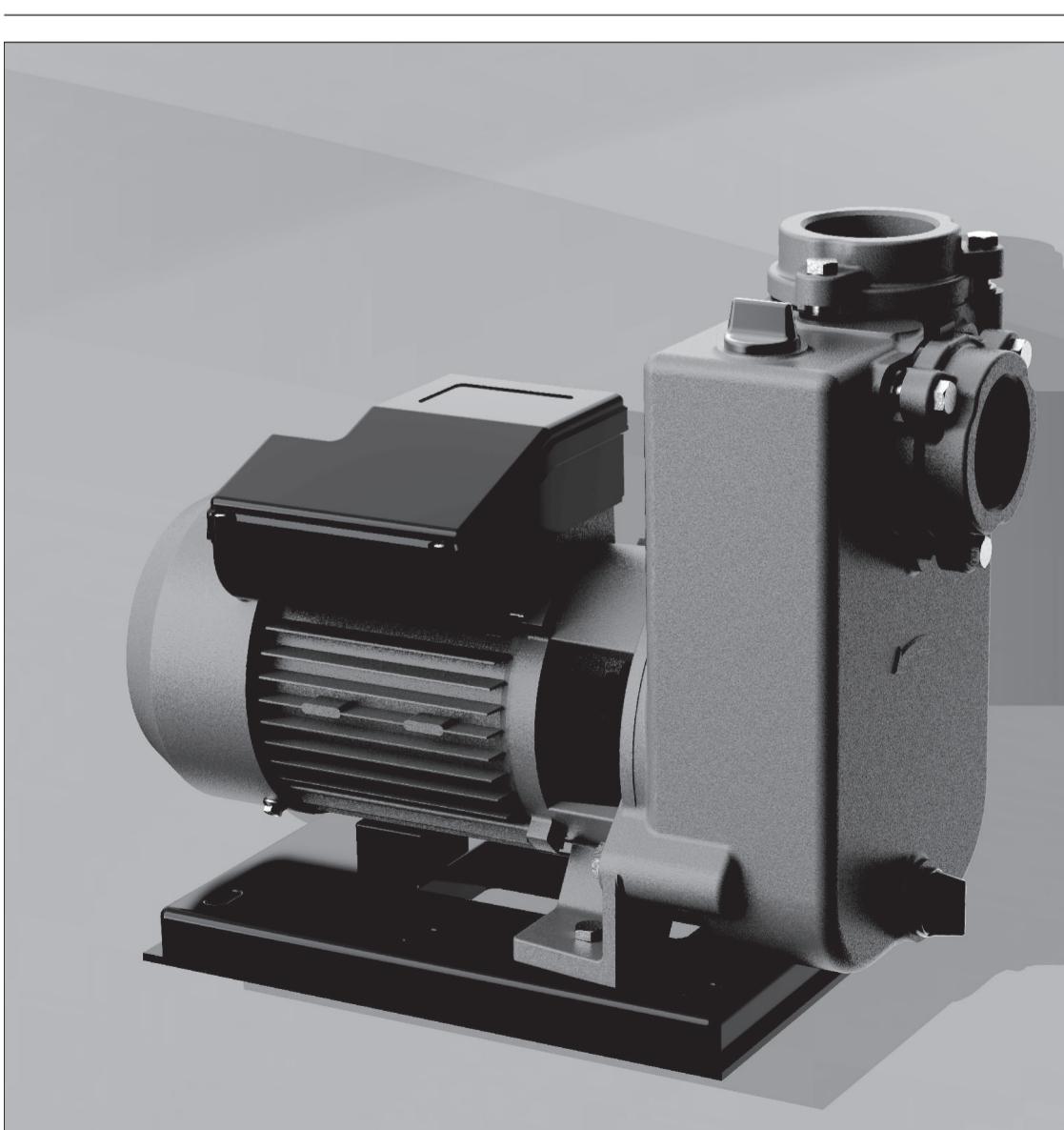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최근 주 장관들을 모아 위원회를 꾸리고 다른 국가의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 달 안에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은 운영하는 메타는 로이터에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조치를 고려하는 당국이 청소년들을 덜 안전하고 규제되지 않는 사이트로 내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 금지 조치를 준수하겠다”면서도 “청소년들이 매주 40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소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했다.

또 프랑스는 SNS 금지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한 법안을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새 학년도 개학일인 오는 9월 1일부터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